

# 광주 생산 기아 스포티지 일본차에 가격 역전 당하나

### 미국,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한국산은 아직 25% 유지 FTA 2.5% 가격 우위도 상실...8월 수출 증가 불구 불안감 고조 현대차·기아 등 초긴장...정부 "최대한 빨리 15% 적용되도록 노력"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기아, 오 랜드광주 등 국내 자동차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일본차와의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아, 오 랜드광주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량은 1만 5911대로 전년 동월(1만 5889대)보

다 증가했다. 이는 미국 현지 수요 회복과 스포티지 등 주력 차종 판매 호조에 따른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로 수출 확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전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 혜택을 통해 일본산보다 2.5%p 낮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산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단행되면서 오히려 일본 차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미국 현지 시장에서 일본차 대비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웠던 한국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수출 물량 중 미국 수출이 50%를 차지하는 기아, 오 랜드광주공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산 자동차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 '비가격 경쟁'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준중형 SUV인 기아 스포티지는 25% 관세를 적용해 3만 290달러~4만 390달러에

판매되고 있고, 현지 인기 차량인 대형 SUV 혼다 오딧세이는 3만 7500달러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혼다 오딧세이는 이날부터 관세가 기존 25%에서 15% 낮춰지면서 3만 4500 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 스포티지를 사려던 소비자들이 오딧세이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현재 25% 관세를 적용한 기아 스포티지의 가격은 임시방편으로 이익을 최소화한 가격대로, 25% 관세적용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헌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에 대해 "우리가 최대한 빨리 (15%로 적

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 아니더라도 일회성 관세 인하"를 밝힌 상태다. 관세 문제는 정부의 외교 대응이 병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속한 한미 최후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과의 가격 역전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특히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관세 차이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가 인하된 지금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즉시 위협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

## 광주·전남 수출페스티벌 186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 지역 중소기업 69개사 참가 23개국 비즈니스센터장 초청 수출 상담·계약·컨설팅 원스톱 지원



16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전남수출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나경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2025 광주·전남 수출페스티벌'을 열고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만들어낸 수출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올해 4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광주기업 36개사, 전남기업 33개사 등 총 69개사가 참가했다. 일본, 호주, 중국을 비롯한 23개국에서 초청된 27명의 비즈니스센터장이 직접 참여해 수출 상담과 계약 체결, 시장 정보 교류 등을 이어갔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박필순 광주시의원,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서 광주지역 6개 기업과 전남지역 5개 기업이 총 11건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광주기업은 유기농 식품, 전자 설비, LED 뷰티 기기 등 분야에서 1018만 달러(141억여원)를, 전남기업은 화장품, 선박 장치, LED 제품 등에서 830만 달러(115억여원)를 계약했다. 총 계약 규모는 1860만 달러(256억여원)에 이른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수요와 지역 제품을 연계하는 '비즈니스센터' 제도가 뒷받침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비즈니스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무역·유통업

운영하는 교민 기업인을 센터장으로 지정해 시장 맞춤형 판로를 지원한다.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적합한 지역 제품군을 연결해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제로 행사 기간 열린 1대1 수출 상담에서는 식품, 뷰티, 전자 분야 기업들의 상담 건수가 집중되며 수출계약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광주본부세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국제교류센터 등 수출 유관기관이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무역 절차, 금융 지원, 법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해외 바이어와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돼 참가 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주와 전남은 자동차·에너지·식품·화장품 등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꾸준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해 왔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호남권 전체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협력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참가 기업들의 계약 후속 지원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출계약이 단순한 행사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해외 거래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류·통관·금융 지원을 연계해 계획이다. 강 시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페스티벌이 호남권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농관원 전남지원 무·배추 등 추계작물 10월까지 정기변경 신고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오는 10월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에 대한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농업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보조 사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 전남지원은 무와 배추 등 9~10월 추계 중요 농작물들의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는 무·배추 재배 면적 각 0.1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배보합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전송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내를 받은 경영체는 재배 품목, 농지 추가·삭제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변경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이며, 신고가 끝나면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재배품목에 대한 이행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에 나선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남운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윤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 중소기업 추석 자금 6000억 지원

신규자금 1.2P까지 우대금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제품생산 및 납품대금 결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등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성이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이번 특별 자금 지원이 명절을 앞두고 직원 임금 체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지역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윤 기자 zzang@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100%까지 환불

### 현금 최대 95%, 적립금 100%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액면의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사업자 약관 점검 결과'와 '표준 약관 개정'을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원큐브마케팅(기프팅), 즐겨온(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니버), 티사이언티픽(기프티샵), 페이즈북엔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처랜드), 한국선블카드(모바일팝·에드머니)였다. 공정위는 8개 회사의 환불 제한이나 환불수단 제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 회사들은 회원 탈퇴나 자격을 상실했을 때,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는 잔여 포인트까지 없애도록 했다.

또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경우는 환불을 제한하거나,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만 돌려주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기한을 '구매·충전일'이 아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 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수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도 바꾸도록 했다. 특히 '환불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다. 심사 대상 업체들은 공정위가 지난 11일 개정된 환불 비율 상향 표준약관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현금 환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경우 95%까지 환불을 해줘야 한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에 상관 없이 잔액의 10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기준을 90%로 그대로 유지했다. /장영윤 기자 zzang@

## "프리랜서 소득자료 건보공단에 실시간 제공"

### 국세청, 보험료 조정·정산 편의

국세청은 "보험료계사·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프리랜서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내고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

이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해 증빙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국세청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상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면 주가부양 역행"

### "구조조정·경영권 방어수단 사라져"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오히려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에 따른 주가부양 역행 ▲해외 경쟁기업 다수의 자사주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로 인한 사업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유인이 약화해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의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 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았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제한돼 취득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 영국, 일본의 시총 상위 30위 기업들의 평균 자기주식 보유 비중도 각각 24.54%, 4.93%, 5.43%로, 우리나라 평균인 2.31%보다 높았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도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라 자기주식을 활용해 왔다. 보고서는 석유화학 업종을 예로 들어 상호주를 보유한 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면 현재 시급한 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할 경우 자본 감소로 대출과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업력별 고유 사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기주식의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으로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인 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이 같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449.62 (+42.31)
↓ 코스닥	851.84 (-0.85)
↓ 금리(국고채 3년)	2.417 (-0.026)
↓ 환율(US D) (오후 4시 52분 기준)	1379.75 (-9.25)